

특 별 기 고

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정권의 말로



박 석 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2012년 한창 대통령 선거 운동으로 시그립던 시절, 그래도 조금 깨어 있거나 지각이 있던 사람들 사이에는 “어떻게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이 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퍼져 있었다. “경력이나 이력을 보아도 한 나라를 통치할 자격을 구비하지 못했지 않느냐”라면서 대통령감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러나 지역주의가 모든 논리를 뒤엎고, ‘개발독재의 산업화’라는 신화에 현혹되어 결과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생으로 이어지고 말았다. 선거가 끝난 뒤로도 ‘국정원 댓글’이라는 부정선거 시비가 끊이지 않았지만 선거 불복은 오히려 역풍을 맞는다고 입도 뻥긏하지 못한 채, 태어나서는 안 될 정권이 출범하여 무려 4년에 가깝게 나라를 분장질하였다. 그리고 이제야 국민들이 ‘하야’와 ‘퇴진’을 외치며 전국의 모든 도시 중앙 거리에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였다. 서글프고 비참하다. 짜증이 나고 우울하다.

법조칼럼



박 승 일
변호사·광주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광주지방변호사회 노강구 회장을 비롯한 광주·전남지역 변호사 220명이 지난 9일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고자 하는 법조인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한다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현 시국을 대통령의 지인이 타인 앞에 호가후원한 권력형 비리 차원을 넘어서 결국 대통령이 국가권력을 사유화함으로써 헌정질서 파괴에 이른 문제로 보았기 때문이다. 변호사들은 대한변협에서 지난달 28일 대통령 스스로 진상규명을 위한 양심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 성명을 발표한 이래, 특검을 통한 사대규명, 중립내각의 구성 등 정치권의 진지한 반

‘대학’(大學)이라는 중국의 고전은 “정치의 근본은 용인(用人)과 이재(理財)다”라고 정확하게 선언하고 있다. 인재를 제대로 발탁하여 업무를 전담토록 하는 용인, 나라의 부(富)를 늘려 나라가 부해지고 국민의 살림이 늘어나는 올바른 경제정책을 펴는 것이 ‘이재’이다.

200년 전에 다산 정약용은 통치 원리의 핵심으로 “민생도 중요하게 여기고 국법도 존엄하게 해야 한다(以重民生 以尊國法)”라고 말했다. 민생과 국법이 함께 가야 하지만 민생이 먼저 해결되어야 국법도 존엄해진다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백성들의 삶이 보장되지 않고서야 법을 지키면 무의하며, 과도한 법 집행에 민생이 파탄 나면 어디 법의 존재 의미가 있겠는가.

잘못된 정권의 탄생으로 얼마나 많은 무고한 백성들이 생명을 잃어야 했던가를 생각해 보자. 무고한 백성이 간첩으로 조작되고, 세월호에서 그 많은 학생들이 수장되고, 경찰의 물대포에 선풍한 농민이 죽어가도 눈도 깜짝 안 하던 정권. 거

기 어디에 민생이 있고 국법이 있었던가.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 맹자(孟子)는 잘못하는 통치자는 반드시 권좌에서 끌어내려야 한다고 하였고, 정약용도 ‘탕론’(湯論)이라는 글에서 법을 어기고 민생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통치자는 한시라도 빨리 끌어내려 자격 없는 통치자로 교체해야 한다고 했다. 전제군주 시대의 주장이었으니 명색이 민주주의인 나라에서야 더 할 말이 있겠는가.

권력에서 쫓아내야 한다는 전제에서 우리 국민은 과연 아무런 잘못이 없는가도 따져 보자. 자격도 능력도 없는 대통령을 당선시킨 국민은 어쩌라는 말인가. 깊이 뉘우치고 반성해야 할 사람도 또 국민이다.

그 당시 보수 쪽으로 기운 언론인들의 잘못은 없는가. 여당의 발표는 그대로 나팔 불듯 보도해 준 잘못은 또 책임이 없는가. 행여라도 발탁되어 고관대작에 오르리라는 망상으로 줄을 서서 지지해 주던 ‘폴리페서’들은 또 책임이 없는가. 이제 는 모두 죄인의 심정으로 석고대죄하면서 자신의 잘못들을 반성해야 한다.

이제 전제군주 시대보다 더 악독했던 권력의 농단에서 벗어나 민주주의라는 정계에 걸맞은 새 정부를 세우는 일만 남았다. 박근혜 정권은 모든 권력을 내려놓고, 여야가 합의하는 국회 차원의 거국대각을 수립하여 정치와 행정을 이끌게 하고, 내시나 환관에 불과하던 청와대와 정부 각 부처의 고위직 관료들은 모두 물러나게 해야 한다.

행정부 전체를 새 판으로 짜서 민주주의 정부를 세우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체제로 바뀌 내야 한다. 조기 대선도 고려해볼 만하지만, 대통령은 2선으로 후퇴하고 내년 대선을 통해 참다운 민주정권을 수립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 거국대각의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체제가 그래도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생각된다.

현행의 검찰로는 어떤 진실도 밝혀내기 어렵다. 현재의 검찰 일부 간부들이야 그동안 대통령의 눈치나 안색을 살피던 내시들이 아니었는가. 별도의 특별검사 제도를 활용하여 김기춘·우병우 등의 내시 행각을 철저히 파헤쳐, 박근혜 정권의 비민주성과 부도덕성을 만천하에 공개해야 한다. 그들의 잘못이 밝혀지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전모가 밝혀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박근혜만을 하늘처럼 받들며 온갖 아부와 절대 복종으로 모든 국민을 우롱하던 새누리당의 이철현 대표를 비롯한 친박 전체는 당장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백성을 속이고 절대군주에게 내시 노릇만 했던 잘못을 뉘우치면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그런 당은 반드시 해체되어야 한다.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은 오직 국민만이 가지고 있다. 모든 국민이 총결기하여 그동안 우리를 속여 먹던 패악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 모두 일어나 ‘하야’와 ‘퇴진’을 외치며 거리로 나와야 한다. 그것만이 지금 국민이 해야 할 일이다.

변호사도 들고 일어난 이유

성과 수습과정을 지켜보아 왔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대통령은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사과에 그쳤고, 여야는 특검시행과 행정부 구성에 이견을 보이며, 검찰은 국정농단의 본질보다 개인적 비리 추적에 힘을 쏟고 있어 국민이 분노한 근본적 원인을 외면하고 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 사유화와 최순실의 국정 농단에 대해서 국민은 깊은 자괴감과 절망감을 느끼면서 거리로 나서고 있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다. 과거 독재에 맞서고 민주주의를 스스로 지켜온 우리 국민의 4·19와 5·18정신, 6월 항쟁의 민심 흐름이 또다시 이번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변호사들이 그날 지켜보지 들고 일어난 이유는 국민주권의 실현에 밀려들고 되고 우리의 목소리가 더해져 좀 더 나은 세상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를 바라는 자그마한 소망에사다.

지난주 화요일 광주전남변호사회에서

10시간 남짓 실시한 설문조사에 100여명의 변호사들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면서 70%가 넘게 대통령의 사임에 대한 의견을 주어 결국 서명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서명운동 시간을 20시간으로 제한했는데도 220명이 참여하였다. 하루도 안 돼 마감한 서명운동에 출장 등으로 참여하지 못해 못내 아쉬워한 변호사도 있다.

이처럼 전국의 변호사들이 비슷한 내용으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거나 집회를 갖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비상시국회의를 상설화하였다.

물론 변호사들의 이런 집단행동에 대해 일부가 의문을 품고 있다. 오히려 정국에 혼란을 가중하니 자중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행위 여부도 조사되지 아니하여 헌법상 추후 조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국회의 탄핵절차 등도 있으므로 이를 지켜볼 일이지 행동으로 나설 급박성이 있느냐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언론보도를 통해 이미 대통령의 국가정보 사적 유출, 특정인의 대통령 연설문 수정, 인사 개입, 기업을 통한 강제모금, 국무회의의 개입, 국가 주요정책

에 대한 개입, 예산 전용 등이 사실로 드러났고, 게다가 일부 범조인이 국정농단에 참여한 사실은 직업인의 양심상 부끄럽고 반성하게 만든다.

이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절차를 무시한 통치권 행사에 국민이 주권자로서 헌법의 수호자 겸 수임권자인 대통령에 대해 직접 책임을 묻는 행동을 막을 수 없다.

수능을 며칠 앞둔 많은 학생들 사이에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정치인 중 어떤 길을 걸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고 민심을 전했다. 전직 대통령 누구처럼 스스로 물러설지, 누군가와 같이 자살할지, 아버지처럼 측근으로부터 배신당할지 자못 궁금하다는 표정이다.

왜 우리 대통령들은 말로가 다 안 좋을까. 한숨을 쉬면서 필자는 앞의 결론 말고도 몇몇 누군가처럼 남은 임기 내내 일도 못한 채 청와대에서 술만 마시다가 나올지, 아니면 퇴진 후 수사와 처벌이 무서워 성공적 권력이양을 꿈꾸며 정치적 승부수를 띄울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백담사는 안가겠지’라는 아내의 물음에 헛웃음마저 나온다.

오피니언

기 고



박 상 권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지역신문은 빠르게 진화 중이다. 지난 4일 대전에서 열린 지역신문컨퍼런스에서 다시금 혁신의 현장을 재확인했다. 경남도민일보를 SNS 활용으로 독자와 협업저널리즘으로 종합콘텐츠기업으로 변신했다. 실시간 뉴스편집과 네트즌과 쌍방향성을 강화하며 독자가 생산한 뉴스를 소셜 네트워크에서 공유한다.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한 충북일보도 도심재생과 골목상권 문제를 기획취재하며 지역밀착형스토리텔링의 진면목을 보여줬다. 지난해 지역신문들은 이처럼 수많은 논문은 분석과 해외 현지취재를 거쳐 재러시징과 현대적 상권을 접목하며 지역발전에도 앞장섰다.

특히 국제신문 종교생기자단은 21년째 운영 중인데 올해까지 2200명을 배출했다. 학생기자들은 인터넷카페에서 회의를 거듭하면서 지역 청소년뉴스를 담당

지역신문의 진화와 혁신

하는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다했다. 시민기자 부문의 특이한 수상자는 주간함양 리즈의 역할과 가치를 실현한 것이다. 인구 4만4000명의 군 단위에서 주민들이 제작한 뉴스를 주민들 스스로 흥미와 보람과 애郷심을 느끼고 공감하고 전율한다. 주민들의 참여 열기가 높아지면서 군청과 kt는 초고속 인터넷망을 마을마다 확대 설치해줬고 주민들은 마을회관에서 자신들이 제작한 마을뉴스, 군청소식, 선거보도를 실시간 시청하고 있다.

지역신문이 발달한 미국에는 1500개 지역신문과 1600여개 지역텔레비전이 있다. 대표적인 글로벌 지역신문은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미국인 90% 이상은 중앙 뉴스보다 지역뉴스에 더 관심이 높다. 집 근처 먹을거리,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소식, 출생과 부음 등 우리 동네 소소한 이야기다.

최근 3년 동안 지역신문의 눈부신 변화는 단연 인터넷 모바일 방송융합의 크로스미디어의 대성공을 꼽을 수 있다. 저마다 신문위기를 말할 때 주간 성주신문은 종이신문, 인터넷, 방송융합을 통한 소위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생태계 기반의 경쟁전략을 구사했다. 최근 여러 지역신문들은 이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논문 등에서 해외인문사제로 이따금 조우하던 일이 우리 지역신문의 자랑스러운 성공신화로 부상하고 있다. 종이신문 콘텐츠를 역동적 영상

으로 재현하고 주민과 함께 제작해 송출하는 지역미디어야말로 진정한 로컬저널리즘의 역할과 가치를 실현한 것이다. 인구 4만4000명의 군 단위에서 주민들이 제작한 뉴스를 주민들 스스로 흥미와 보람과 애郷심을 느끼고 공감하고 전율한다. 주민들의 참여 열기가 높아지면서 군청과 kt는 초고속 인터넷망을 마을마다 확대 설치해줬고 주민들은 마을회관에서 자신들이 제작한 마을뉴스, 군청소식, 선거보도를 실시간 시청하고 있다.

지역신문이 발달한 미국에는 1500개 지역신문과 1600여개 지역텔레비전이 있다. 대표적인 글로벌 지역신문은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미국인 90% 이상은 중앙 뉴스보다 지역뉴스에 더 관심이 높다. 집 근처 먹을거리,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소식, 출생과 부음 등 우리 동네 소소한 이야기다. 워싱턴포스트의 오랜 전통은 지역뉴스에 비중을 둔다는 점. 물론 지역뉴스만을 고집하지는 않는다. 1971년 뉴욕타임스는 국방부 비밀문서를 입수해 월남전에 대한 미국정책 과정을 상세히 보도했다. 정부는 국가비밀 누설이라고 제소했지만 연방대법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언론의 역할에 손을 들어줬다. 1971년에는 미국이 베트남전쟁 군사개입 강화를 위해 통킹만 사건을 조작하며 전쟁확전을 노리자 정부 기밀문서를 폭로해 미국인의 거센 반

전운동의 도화선이 됐다. 닉슨정부는 국가 기밀누설혐의로 제소했지만 역시 연방대법원은 ‘국민 알권리’이라며 지역신문의 손을 들어줬다.

2년 전 우리 언론계와 학자들은 뉴욕타임스 혁신보고서 내용에 호들갑을 떨었다. 보고서 핵심은 신문이 가야 할 길은 디지털융합의 혁신이라는 것. 문제는 16년 전 이미 국내 언론계와 학계에서 디지털플랫폼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

그러나 중앙 주류언론의 기득권 유지와 인터넷매체 무시, 편집국 우월주의와 닷컴파로 놀기가 지속되는 비생산적 비효율적 제작환경을 방치한 채 급변하는 디지털미디어시장의 소용돌이에 휩쓸렸다. 늦었지만 우리 지역신문은, 그토록 부러워하던 미국보다 인문학적 상상력과 IT융합의 강점을 무기로 진화와 혁신의 전설을 언론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 디지털모바일 커뮤니티에서 하루 6시간 이상 머무는 세계 4개국 중 하나인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 저널리스트로서의 사는 일은 곧 멀티미디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날로 높아지는 독자 수준과 지역발전의 목마름을 사이디우스로 해결해야 한다. 그 길은 애오라지 지역민 삶 속으로 들어와 지역과 지역주민이 주인인 신문, 지역과 지역주민이 즐기는 신문을 만드는 일이다.

社 說

대통령은 들었는가 100만 촛불 분노의 함성

지난 주말(1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촛불집회가 열렸다. 학생·주부·직장인 등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주최 측이 추산한 시민은 100만 명(경찰 추산 26만 명)이 넘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 모인 집회였다. 전국 각지에서 서울로 가는 관공버스가동이 날 정도였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쳤다.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진상 규명도 요구했다. 이날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운집해 인산인해를 이뤘지만 집회는 축제 분위기 속에서 평화롭게 진행됐다. 광주 금남로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도 동시에 촛불집회가 열려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성남 민심을 분출했다.

광화문 집회에는 추미애 민주당 대표, 우상호 원내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도 함께했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김부겸 민주당 의원, 이재명 성남시장 등 야권 인사들도 참여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쳤다. 또 이날 집회에 참석한 황영철·오신환 새누리당

의원 등 여당 일부 의원들도 박 대통령을 향해 “이제 대통령직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했다.

이날 행진이 시작된 지 한 시간쯤 지나자 시민 일부가 마지막 지점인 청운산 26만 명이 넘었다. 1987년 6월 항쟁터는 청와대로부터 서쪽으로 불과 200m 떨어져 있는 곳이다. 청와대로 향하는 길목에는 경찰 차벽이 설치돼 있었지만 박 대통령도 이날 밤 성난 민중들에 대해 애국적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

다. 심지어 김부겸 전 대표는 “국민의 이름으로 박 대통령 탄핵의 길로 가야 한다”고까지 주장했다.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은 동영상 속 대구 여고생의 절타가 말해주듯 박 대통령 사퇴 요구는 지금 세대와 지역을 초월해 점점 커지고 있다. 계속 버티다 가는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더 불행한 말로를 자초하게 될 것임을 박 대통령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내우외환 경제위기 보고만 있을 순 없잖나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놓였다. 국민의 분노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모두가 한목소리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최순실 게이트에 가려 난파 직전의 경제위기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착화 된 내수경기 침체로 문 닫는 상가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수출까지 꺾여 대기업들도 한치 앞 경기를 예측하기 힘들다고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은 우리 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트럼프의 정책으로 불패 광주·전남 주력 산업인 자동차와 철강도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리스크가 지역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다.

이 같은 내우외환의 경제 위기를 타개하는 첫 걸음은 정치와 경제의 분리 운영이다. 임종룡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우선 인사 청문회가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임 내정자는 지난 2일 후보로 지명됐지만 최순실 게이트에 막혀 경제사령탑에 취임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국무총리 내정자와 함께 인사청문회 개최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국민의당은 임 내정자에 대한 원포인트 청문회를 시사하고 있다. 새누리당도 임 내정자에 대한 청문 절차를 우선 진행하자는 입장이어서 성사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만 양보하면 어정쩡한 경제사령탑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아무리 최순실 게이트 정국이 라지만 정치적 목적을 위해 민생의 발목을 붙잡아서는 안 될 것이다.

無 等 鼓

가발의 역사는 동서양 모두 기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가발은 고대 이집트에선 신분을 구분 짓는 도구이자 패션 소품으로 사용됐다. 탈모를 감출 목적으로 사용된 것은 로마시대였다.

가발의 유행은 중세 이후 유럽에서 시작된다. 16세기 매독이 창궐하면서 그 증상의 하나인 탈모 환자가 급증했다. 매독에 걸린 남성들이 지옥을 감추기 위해 가발을 쓴 것이다.

가발을 유행시킨 곳은 17세기 중반 프랑스 궁정이었다. 당시 국왕이었던 루이 13세는 22세부터 머리가 빠지기 시작

했다. 그의 왕비인 앤이 바람을 피우는 바람에 스트레스성 탈모가 생겨 가발을 사용했다는 설과 바람기 많은 왕비가 머리 빠진 모습을 싫어할까봐 가발을 썼다는 설이 있다.

아재들은 신하들은 ‘모두 가발을 쓰면 누가 대머리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왕을 돕기 위해 가발을 착용했으며, 이것이 궁정패션으로 정착한 계기다. 루이 13세 뒤를 이은 루이 14세는 48명의 가발 장인을 고용할 정도로 가발 마니아여서, 자연히 가발 패션은 프랑스를 넘어 유럽 전역으로 퍼졌다.

우리나라에서의 가발은 여성들의 사회와 신분을 나타내는 척도였다. 조선 영조 때는, 어린 신부가 시아버지에게 인사하려고 일어서다가 무거운 가발 때문에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숨진 일이 발생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가발의 인기는 유럽이든 우리나라든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시들해진다. 하지만 아직도 영국 상하원의 의장과 재판소 재판관은 권위의 상징으로 가발을 착용한다.

비선 실제 최순실의 핵심 측근인 차은택의 가발 벗은 대머리 모습이 공개돼 논란을 일으켰다. 사진기자들의 플래시 세례에 대머리 상태의 얼굴을 한사코 가리던 차은택은 다음날 삭발한 모습으로 언론에 비쳤다.

‘아름다운 꽃도 열흘을 넘기지 못하고, 막강한 권력도 10년을 가지 못한다’라는 옛말이 틀리지 않음을 모든 국민이 느끼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국정을 농단한 세력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아니 어떤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는 중인지도 모른다. 어차피 그들은 국민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한 부류이니가. /채희종 사회2부장 chae@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시11월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6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지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월 500원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